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
이상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통령령 제341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0조의5로 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조의5(실무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회의(이하 “실무협회의”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③ 실무협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마약류 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 학계·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회의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협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⑥ 실무협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회의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회의(이하 “실무분과협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수사·단속·정보실무분과협회의
2. 치료·사회재활실무분과협회의
3. 예방·교육·홍보실무분과협회의

⑦ 실무협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회의”로 본다.

제2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회의 및 실무분과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조의7(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이하 “학교교육”이라 한다)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한다.

제5조의7제3항 중 “개의(開議)”를 “개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를 제20조의6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제20조의7 및 제20조의8로 하고,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
3.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6.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
7.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
8.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의 목적
2. 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
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 한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 그 밖에 마약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제20조의5(중전의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조의3제2항”을 각각 “법 제5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6(중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를 “법 제51조의5제1항”으로,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5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의7(중전의 제20조의2)제1항 중 “법 제51조의2제5항”을 “법 제51조의6제6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51조의2제1항”을 “법 제51조의6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1조의2제4항”을 “법 제51조의6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법 제49조 및 이 영 제18조”를 “법 제51조의5 및 이 영 제20조의6”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3.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

제28조의2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같은 조 제18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중전의 제17호) 중 “법 제49조”를 “법 제51조의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의2 및 제20조의5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17일
2. 제2조의7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9일
3. 제2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9일

제2조(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 제출 기한을 국무총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04호, 2023. 8. 8. 공포, 2024. 2. 9. 및 8. 9. 시행, 법률 제19648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및 8. 17.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며, 마약류대책협의회 위촉 위원 임기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2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의3부터 제2조의6까지 신설)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위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추가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제2조의7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시책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